

삼성에 맞선 다윗의 투쟁,

출교 6백50일 만의 승리



이명박 시대에도

고려대

출교생들처럼

승리할 수

있다

>> 관련 기사 4면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와
'일심회' 제명

- 최기영 · 이정훈

제명을 반대한다
- '일심회' 담당

김승교 변호사 인터뷰

3, 12면



다가오는 이명박 시대

- 이명박의 역주행

- 이명박의 '올드 · 배드 보이'들

2면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미국 대선과 비열한 클린턴 부부

5면



국제

-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이집트 민중의 연대

- 독일 지방선거에서 링케의 악진

6~7면

맑스와 <자본론> ②

- 상품 가치의 비밀

8면

여성 칼럼

- 앵겔스와 여성 억압의 기원

9면

노동자 투쟁과 승리 소식들

10~11면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
counterfire.or.kr](http://www.counterfire.or.kr)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구정 연휴 관계로 한 호 쉽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요즘 웃기는 웃지만 걱정이 태산 … 당선이 되고
기분이 좋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걱정
이 많이 됐다. … 어떤 모습으로 퇴임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지금부터 많이 하고 있다.”

— 이명박

“우리고 놀랍다. 이렇게 빨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될 줄이야 … 우리야 사실 뭐,
솔직히 ‘만세’다.”

—이명박에게 감사하는 강남 대치동 모 학원장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는 방송이나 통보가 있으면
모든 문서를 챙겨 몸에 지니고 가능한 한 빨리 사
무실을 벗어날 것 … 수사관을 만나더라도 질문에
답하지 말고 몸수색에도 불응할 것”

— 삼성SDI의 ‘특검 대비 교육’

“북한 인권 덮어 놓자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
보도 좌파라고도 말할 수 없는 수구적인 사람
… 햇볕정책에서 북한 인권을 덮어놓고, 묵인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우익 단체들이 주최한 북
한 인권 세미나에서
‘조갑제닷컴’ 기자와 인터뷰한 주대한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마녀사냥

김형근 교사를 석방하라

전북경찰청 보안수사대가 2005
년에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에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1백80
여 명을 인솔해 간 혐의로 전교조 김
형근 교사를 구속했다.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조선
일보>가 “빨치산 추모행사 참가”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 마녀사냥의
시작이었다.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4
월 김 교사의 집과 학교에까지 들이
닥쳐 수사한 후 9개월 동안 아무 조
치가 없다가 지금 갑자기 구속했다.

추모제 참가는 학교의 허가 아래
한국교총 교사들도 함께한 통일 등반
행사의 일환이었다. 더구나 미군정과
이승만 친미독재에 맞선 투쟁의 역사
를 알리는 게 왜 ‘죄’란 말인가. 김형
근 교사는 “내가 물려서면 매카시즘
에 의해 누군가 또 희생당할 테니, 당
차게 싸우겠다” 하고 말했다.

김형근 교사 구속은 이명박 당선
이후 늘어나는 국가보안법 마녀사
냥의 일환이다. 평화사진작가 이시
우 씨는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고,
농민시인 정설교 씨는 범민련 후원
회원 가입과 FTA 반대 시위 참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심상
정 비대위의 ‘일심회’ 관련자 제명
추진은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을 더
욱 부추기는 격이 될 수 있다. 심상
정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 보수 언론
과 한나라당이 환영하면서 ‘국가보
안법 위반자를 속아내야 한다’고 주
문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에 굴복하지
말고 단결해 투쟁해야 할 때다.

최미진

노무현의 바통을 받은 이명박의 ‘역주행’

얼마 전에 끝난 세계경제포
럼에서 각국 지배자들은 세계
경제 위기와 이 때문에 격화
될 계급 투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투기자본의 거물인
조지 소로스는 “시장원리주의
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고, 빌 게이츠도 “자본주
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
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인수위를 대
표해 참가한 사공일은 ‘규제
를 풀고 노사 문제를 해결’하
면 “7퍼센트 성장은 여전히
가능”하다며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역주행’했다.

무식한 데다 저돌적이기
까지 한 이명박 정부가 노동
자·서민을 쥐어짜 ‘재벌·부
자 경제’를 살리는 신자유주
의의 길에 매진하겠다고 공공
연히 선언한 것이다.

인수위는 공무원 수천 명
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우선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1천5백 명을 오는 8월
에 즉각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지가 맞지 않으면 비정규
직 써도 괜찮다”는 점을 솔선
수범으로 보여 주려는 것이다.

더구나 ‘노명박’은 한미
FTA를 비준하려고 검역 규제

를 완화해 뼈를 포함해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한다.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강행

이명박이 추진하는 철도·
전력·우체국 등 공공부문 사
유화도 노무현 정부가 자회사
분할이나 공사화 등으로 준
비해 둔 것이다. 사유화는 기
업에게 이윤을 주겠지만 노동
자·서민은 높은 요금과 열악
한 서비스로 피해만 볼 것이
다.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와
영국 철도 사고가 이미 그 재

리 자판기’이고, 출범하기도
전에 인수위 자문위원이 고액
의 상담료를 받고 부동산 정
보를 흘리는 비리가 일어난
상황에서 “법질서” 운운하며
면담을 취소한 것은 역겹기
짝이 없다.

이명박은 대량 해고당한 비
정규직 노동자들이 유혈 탄압
속에서 한 달 넘게 고공·천막
농성중인 GM대우 부평공장을
찾아가 ‘노사화합과 무파업’을
찬양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연
대는 외면하고 이명박과 웃으
며 사진 찍은 GM대우 이남묵
노조위원장도 불쌍사납다.

부동산 투기꾼이 직접 정부
정책을 자문하고 방향 설정에
참여하고, 이를 이용해 자기
지갑을 채운 고종완 사건은 이
명박 정부에서 수없이 일어날
일들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것처럼 “전기, 가스를 끊고 기
차와 항공기를 멈추는 총파업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할
때, 이를 위해 지금부터 투쟁
과 연대를 건설할 때, 이명박
의 신자유주의와 반동을 물리
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자신이 ‘비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미소 –
GM대우 사장, 노조위원장과 함께
‘노사평화’ 를 다짐한 이명박

강동훈

이명박의 올드·배드 보이들

‘전두환 거수기’ 출신 이경숙	‘투기자본 길라잡이’ 한승수	‘조폭재벌 프렌들리’ 김성호	‘핵폐기장 불도저’ 윤진식
다가오는 이명박 정부가 ‘올드·배드 보이’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다. 이명박은 국보위 입법의원 출신 이경숙과 5·6공재무부 장관을 지낸 사공일을 인수위 사령탑에 앉힌 걸로 성에 안 찼는지 국보위 출신 한승수를 총리로 낙점했다. 한승수의 과거는 오점투성이다. 그의 화려한 경력은 권력의 꿈무늬만 좇아 온 기회주의의 결과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도 일찍부터 실천해 왔다. 그는 김영삼 정부 때 경제부총리로 정리해고법 도입, 금융시장 개방 등 신자유주의 개악을 주도한 장본인이었다. 1997년 한보철강 부도 사태 때는 한보의 엄청난 부실과 부패에 정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	잡아떼다가 결국 경제부총리에서 경질됐다. 2000년 총선 때 한승수는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낙천 대상자였다. 그 뒤에도 한승수는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의 탈법 세탁을 도맡아 온 로펌 ‘김앤장’ 고문과 투기자본인 소버린 사외이사로 나서는 등 “해외 투기자본의 길라잡이”(민주노동당) 구실을 해 왔다.	초래한 1997년 재정부 차관을 지낸 자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김성호와 검찰총장 출신 김종빈은 국정원장 물망에 올라 있다. 김성호는 한화 김승연의 조폭 행각을 “부정이 기득하다”며 두둔한 재벌 하수인이고, 김종빈은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가 못마땅해 검찰총장을 그만둔 자다. 부안 핵 폐기장 건립을 밀어붙이다 산자부 장관에서 물러난 윤진식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금감위원장 시절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이건희 하수인’ 윤증현은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자들은 모두 노무현 밑에서 삼성을 비호하고 집회·시위 자유를 파괴하고 기록적인 노동	자 구속을 이룬 ‘업적’을 인정받아 이명박의 눈에 든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총선 공천을 놓고도 오물을 튀기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당규대로 부패 연루자를 공천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은 발표했지만, 이미 선거법 위반자는 예외로 돌려 이명박 측근 김덕룡 등을 구제했다. 게다가 비례대표 1번은 국보위 출신 인수위원장 이경숙이 맡아 났다고 한다. 손해가 더 큰 박근혜 쪽은 범죄자들의 출마 티켓 확보를 위해 탈당 협박까지 하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오만함에 들떠 악취를 풍기고 있는 이명박과 ‘올드·배드 보이’들에 맞선 반격을 준비해야 한다.
승주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는 두 당원 제명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

최일봉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는 임시당대회에서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통과시키려 한다. 우리는 이들을 동지라고 불러야 한다. 단지 같은 당원이라서가 아니라, 천대와 부당함과 착취에 맞선 우리 노동자 운동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물론 운동 동지라 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무턱대고 그를 방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최·이 두 동지가 누군가를 강간했거나 살인했거나 하는 따위의 일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그들을 제명하는 데 완전히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 석방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두 동지의 구속은 북한 핵실험의 여파 속에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정원이 내사중이던 사건을 서둘러 집중적으로 기획 조사해 터뜨린 사건이었다. 당시 자리 보전을 위해 부심하던 국정원장 김승규는 계속 언론에 정보를 유출했다. 전형적인 마녀사냥이었다. 마녀사냥은 “무언가로 비난받고 있는 특정 집단을 찾아내 벌주려는 시도로, 흔히 그들은 실제로 잘못된 일이 없는데도 단지 그들의 견해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곤 한다.”(폴리스 고급영어사전)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두 동지 제명 얘기는 바로 지난해 말부터 부풀려져 제기되고 있는 ‘종북주의’ 문제라는 마녀사냥적 맥락 속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모든 언론과 한나라당이 이 맥락 속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논평하고 있다.

그런데도 심 비대위는 두 동지 제명 사유가 북한 정권에 당직자 인적사항을 넘긴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이정훈 동지의 경우는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확정된 최 동지 판결문의 요약 발췌문을 대의원들에게 나눠주는 아비한 짓마저 하려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백보 양보해 최기영 동지의 당직자 인적사항 유출 혐의가 설사 어찌어찌해 모종의 사실이 됐대손 쳐도 당직자 성향 조사 보고서는 대부분 ‘운동권 뒷담화’ 수준의 얘기들이다. 물론 보고서에 부정적으로 언급된 당원들의 경우 매우 불쾌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억압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쾌할 것이다.

연막

“그러나 이런 보고서가 우리 운동에 심각한 문제를 낳지는 않았다. 남한 지배자들을 이롭게 하지도 않았다. 지난 민중운동 역사에서 연대하지 말아야 할 세력을 진보적 세력이라고 보는 착각과 오류는 흔히 있던 일이다. 평등파 내 다수도 구 소련 지배계급을 사회주의자들로 착각하

고 추종해 온 역사가 있지 않은가? 군사독재 시절 김대중이 일부 미국 지배자들과 남한 민주화운동 정보를 나누고 그들의 도움을 얻으려 했다 해서 그가 ‘미제의 스파이’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종류의 오류는 운동 내 토론과 논쟁을 통해 설득할 문제이지 국가 탄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 탄압은 오히려 진정한 토론을 막을 뿐이다.

“게다가 비대위의 태도는 엄연한 이중 잣대다. 당원 정보 유출이 문제라면, ‘자율과 연대’ 회원인 필명 켄타우르스는 〈조선일보〉 인터넷 웹사이트에 ‘타도 주사파’라는 블로그를 만들어 각종 당내 동향과 정보를 알린 바도 있다. 운동을 탄압하고 있는 남한 지배계급에게 정보를 유출한 것이 훨씬 더 커다란 문제일 텐데도 비대위는 이 당원을 문제 삼지 않는다. …

“당시 당 지도부는 최기영 씨를 직책에서 해임하고 대국민 유감을 표현했다. [그러므로] ‘편향적 친북당 이미지’는 당내 평등파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 낸 성격이 짙다.

“‘종북주의’ 운운하면서 국가 탄압을 수용해 당권을 장악하는 데 활용하려는 것은 운동 진영을 분열시키는 재앙적인 태도다. 비대위가 [최·이 두 동지들을 제명하려는] 것은 민주노동당을 체제 내로 길들이려는 우파에 타협하는 것이자 당내 반대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정병호·서범진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선거 유세문에서)

당직자 정보 대북 유출을 비난하는 것

47년 전 32살의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에게 지난 1월 16일 무죄가 확정됐다
— 국가 탄압에 타협해 동지를 내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국제적으로도 악명 높은 마녀사냥 도구를 이용한 남한 국가의 탄압 문제를 숨기고 당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기회주의자들의 교묘하고 능청스러운 연막 전술이다.

그것은 아쉬운 대선 결과의 책임을 당권 경쟁자들에게만 떠넘기고 다가올 총선과 이후 선거들에서 주류 사회의 환심을 사겠다는 기회주의적 선거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자주파의 주요 리더로, 비슷한 보안법 사건의 관련자인 김창현 전 사무총장의 비례대표후보 선정 저지를 겨냥하고 있는 듯하다.

“주적은 국내에 있다”

심상정 비대위는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93년 전 독일사민당 급진파 지도자 칼 립크네히트의 말과 정반대로 주적을 북한 당국인 양 착각하고 있다. 비대위는 최·이 두 동지가 연루된 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당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시키려 한 북한 당국에 엄중 항의하고 이후 북한은 남한의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북한 체제를 비판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십만 명이 굶어죽고, 아동 영양실조가 만연해 있는 반면,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 지도자의 아들들은 스위스 등지의 국제학교에서 공부하고, 민주적 권리와 노동기본권도 용인되지 않는 사회를 노동자 정당이 비판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라.

그러나 비대위는 오히려 남한 당국에

엄중 항의하고 민주노동당 운동에 대한 남한 당국의 개입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했다. 두 동지의 석방을 요구하고 보안법을 비난함으로써 말이다.

또, 북한보다 미국 제국주의 비난에 더 열을 올렸어야 했다. 노움 촘스키나 하워드 진, 브루스 커밍스 등 세계 유수 지식인들이 그랬듯이 말이다. 가령 북핵 문제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을 부추긴 것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임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나 미국 언론인 존 페퍼 같은 자유주의자들도 지적하는 바인데, 민주노동당 비대위가 침묵하는 것은 전혀 좌파답지 않다.

사실, 심 비대위의 ‘공헌’은 민주노동당 내 PD(평등) 파들이 ‘좌파’라는 신화를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8일 당 게시판에 올린 “‘종북’, 패권주의, ‘제2창당’론에 대한 다함께의 입장”에서 이미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 확대간부회의의 비대위안을 지지하는 것은] ‘자주파’에 반대해 일시적으로 뭉친 갖가지 이질적인 조류와 집단, 개인들이 제시하는 당의 미래에 대한 상이한 비전이 과연 무엇으로 판명나는지 대중에게 입증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실로 3주 만에, 심상정 비대위를 지지하는 PD는 민중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의 다양한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나고 대중에게 입증되고 있다.

1989년 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가 방북했을 때 당시 인민노련 등 대부분의 PD 파들은 이들에 대한 호심한 마녀사냥과 국가 탄압에 맞서기를 회피했다. 물론 지금처럼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말이다. 당시 인민노련 지도자 노회찬은 5년 뒤 김일성 조문 파동과 서강대 총장 박홍의 주사파 발언 파동 상황에서 우익과 공안세력의 마녀사냥에 추임새를 넣었다.

대체로 마녀사냥의 제물, 속죄양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매력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아닌 경우가 흔하다. 나치 박해의 생존자 마르틴 니뮐러 목사의 유명한 시구(詩句)는 고통스러워 불확실해진 목사의 기억 때문에 몇 가지 상이한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는 나치가 여호와의 증인들을 잡으러 왔을 때 자신이 침묵했음을 후회하는 것도 있다. 오늘날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이나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친제국주의 국가가 문제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저항세력의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이나 민간인도 사상을 입히는 차량폭탄 공격 방법 등의 전술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서방의 제국주의적 점령이 문제다. 알카에다는 매우 불쾌한 존재이지만 9·11 테러를 미국의 중동 억압과 수탈 문제에서 분리해 바라보면 엉뚱한 편에 서게 된다.

심 비대위는 자신이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건지 잠시 멈추고 돌아봐야 한다.

우리의 승리는 전체 학생·노동 운동의 승리입니다

출교 철회를 위한 천막농성 6백50일을 마치고 강의실로 돌아가게 된 강영만 동지가 출교 철회 투쟁 승리의 의미를 짚어 본다.

2008년 1월 29일 서울지방법원은 출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본안소송(출교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사회 진출의 시기가 현저하게 늦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출교생들이 강의실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줬다. 1월 30일 이기수 고려대 신입 총장도 “복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무릎연골 파열과 허리디스크에 시달리고 무려 6백50일 동안 무더위와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천막농성을 이어 온 결과 출교생들이 값진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우리가 강의실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광범한 연대 덕분이다. 학교 당국이 뒤집어쓴 “패륜아”라는 멍에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지들이 끈질기게 연대해 줬다.

많은 고려대 학생·직원·교수님들이 출교 철회 서명·탄원 운동, 수십 차례의 집회에 함께 참가하고, 농성 기금 마련 모금 등에 동참해 수천만 원을 후원해 준 것이 가장 큰 힘이 됐다. 특히 고려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집회 때마다 참가해 왔고, 명절 때면 보양식을 건네주며 노학연대의 아름다운 전통을 보여 줬다.

학내의 연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출교가 잘못됐다는 강력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해 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과 임종인 의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삼성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 학생운동 단체들 등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의 연대도 큰 몫을 했다.

메이데이 집회, 노동자대회, 민중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노동자들이 모금해 준 수천만 원도 우리가 끈질기게 싸울 수 있



출교 철회 투쟁은 부패 기업의 대학과 사회 지배에 맞선 투쟁이었다

는 힘이 됐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통쾌한 승리이기도 하다.

출교는 2005년 이견희 반대 시위에 대한 보복이었으므로 출교 철회 투쟁 승리는 삼성에 맞선 2차전에서도 우리가 승리한 것을 뜻한다.

연대

그런데 아직 학교 당국이 출교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은 남아 있다. 이기수 신입 총장은 “복합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학교 당국이 항소 취하의 조건으로 “사과와 반성”을 바랄 수도 있다. 우리를 “고려대 졸업생으로 만들 수 없다”며 항소를 결정한 재단은 끝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우리에게 굴복하라는 압력을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과와 반성”을 종용하는 것은 학교 당국이 허위로 기술한 ‘교수 감금 일지’를 무조건 인정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또, 재단이 항소이유서에 밝혔듯 출교 징계는 2005년 이견희 반대 시위에 대한 보복이므로 ‘사과’는 이견희의 부패와 노동자 탄압에 반대한 것을 ‘뇌우치고 후회’하라는 뜻이다.

지난해 법원이 출교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조건 없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는데도, 재차 사과와 반성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치졸한 처사다.

오히려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항소를 결정해 교육기관임을 스스로 부정한 고려대 재단이야말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고려대 당국은 우리를 확실하게 복학시키고 조건 없이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물론 이번 기회에 너무나도 반교육적·반인권적인 징계인 출교를 학칙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우리의 승리는 2006년 부당한 차별에 맞선 보건대 학생들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우리의 연대가 옳았음을 보여 준다. 앞으로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을 대화의 상대로 존중하고, 출교를 빌미로 진보적 사상, 활동, 심지어 토론회까지 탄압한 전력을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학내 민주주의와 학생 자치권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또 고려대 재단이 출교 이유로 지적했던 진보적 정치 활동과 기업의 대학 지배에 반대하는 활동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05년 이견희 명예철학박사 학위 반대 시위를 벌인 자부심을 갖고, 부패비리 왕초 이견희에 맞서 싸우고 있는 삼성 노동자들과 태안 주민들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 연대할 것이다.

얼마 되지 않지만 남은 농성기금은 이랜드·삼성 노동자들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투쟁과 천막농성에 관심 가져 주고 함께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강제출국 당한 수바수

화성보호소에서 7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최근 당뇨병 판정을 받은 이주노동자 수바수 동지를 법무부가 1월 30일 강제출국시켰다.

수바수의 건강상태는 극도로 심각했다. 지난 1월 4일 검사 결과, 그의 혈당수치는 정상치의 4배로, 당뇨병 환자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14일 검사에서도 3개월 이상

고혈당이 지속된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합병증의 위험이 큰 상태였다.

수바수는 3개월 이상 복통과 시력저하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해 왔지만, 법무부는 외부진료만이라도 허락해 달라는 호소조차 냉혹하게 무시해 왔다. 게다가 “비행기를 탈 정도만 되면 강제출국 시키겠다”고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한국에 인권이 있는가?”

이주노동탄압분쇄비대위는 강제출국을 막기 위해 1월 28일 밤부터 화성보호소 앞 정문을 밤낮으로 지키며 정당한 치료를 호소했지만, 법무부는 이조차 무시했다. 단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권리마저 박탈하더니 이제는 비행기를 타기도 어려운 환자를 마구잡이로 강제출국시킨 것이다.

국가인권위마저 수바수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치료를 위해 일시보호해제를 법무부에 권고해 달라는 요청을 각하했다. 벌써부터 독립성이 사라진 이명박의 국가인권위를 자처하는 것인가.

출국 전 수바수는 “한국에는 인권이 없는 것 같다”며 “여우가 호랑이 가면을 뒤집어 썼다는 네팔 속담처럼 [한국의 인권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과 강제출국을 중단하라!

조지영

갈수록 비열해지는 클린턴 부부

질문 승리가사실은
패배를 의미하는 경우는 어떨 때?
답 지난주 토요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버락 오바마가 승리했을 때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힐러리 로덤 클린턴을 55퍼센트 대 27퍼센트로 물리쳤다. 그러나 미국 정치의 황당한 논리에 따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에서 흑인 유권자 약 80퍼센트의 지지를 얻어 승리함으로써 오바마는 주로 흑인들의 후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 빌 클린턴이 그런 주장을 던지시 퍼뜨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선거 결과 발표 뒤 빌 클린턴은 1980년과 1984년 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도 흑인 공민권 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가 승리했다고 지적했다. 클린턴의 말인즉슨, 오바마는 가장 최근에 오바마 지지를 선언한 상원의원 에드워드 케네디가 말한 희망을 실현하거나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이 아직도 얼마나 뿌리깊은지 잘 보여 준다. 인종 문제는 지난 2주 동안 오바마가 클린턴 부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클린턴 부부는 정치적으로 매우 거칠고 역겨운 팀이다. 그들은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듯하다. 힐러리는 싸움에서 비켜나 고고한 여성 정치인인 양 행세하고, 빌은 밑바닥에서 공격과 수비를 주고받으며 날마다 이전투구를 벌인다.

이것은 교활한 전술이다. 빌 클린턴은 여전히 인기가 매우 높은 인물이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그는 미국 헌법의 제한이 없었다면 2000년에 3선 연임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또, 미국의 흑인 권력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놓았다. 그래서 소설가 토니 모리슨[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흑인

여성 작가]한테서 터무니없게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찬사를 듣기도 했다.

빌 클린턴은 지금 이런 정치적 자본을 이용해 힐러리를 백악관에 보내려 한다. 민주당 평당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명성이 높은 전 대통령의 공격을 오바마가 정면으로 맞받아 치기는 힘들다.

이제 대선후보 경선은 2월 5일의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있다. 그 날 22개 주에서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나 코커스[당원 대회]가 열린다. 그 중에는 뉴욕·뉴저

지·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좌우할 주요 접전지들이 포함된다.

내가 보기에는 다가오는 경선에서 클린턴 진영이 유리할 듯하다. 그 이유는 그들의 경험과 가차없는 태도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이 지난 30여 년 동안 민주당 지지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맺은

연계 덕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2주 전에 힐러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였던 네바다에서 여성과 라틴계의 지지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 전의 뉴

햄프셔 예비선거에서도 신중하게 계산된 이미지, 즉 1970년대 페미니즘의 기수 이미지가 힐러리의 승리에 한몫했다. 힐러리는 뉴햄프셔 예비선거 승리 덕분에, 오바마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뒤에도 경선을 지속할 수 있었다.

하수인

지금 상황이 원원 구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작가이자 블로거인 패트리스 에번스는 지난 1월 25일 <가디언>에 다음과 같이 썼다. “흑인! 여성! 두 사람이 동시에 나왔다! 누가 이기든 획기적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 정치일 뿐이다. 사실, 두 후보가 모두 주장하는 ‘변화’는 결코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

힐러리와 오바마는 모두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의료보험 제도를 대충 땀질하려 한다. 둘 다 미국 경제가 불황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가 돈을 조금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 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첫 임기 동안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시 말해, 힐러리와 오바마는 둘 다 과거의 주요 민주당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제국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부자들이 미국의 정치 체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은 석유업계의 조지 W 부시 친구들한테서는 기부금을 많이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에서는 거액을 받아 왔다.

힐러리나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하면 미국의 노동계급 여성과 흑인 대중의 처지가 상당히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하기 그지없는 공상이다. 모름지기 미국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데를 봐야 할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면죄부 재발급으로 가려는 삼성 · 이명박 특검

삼성 특검이 이미 ‘증거 인멸’ 작업이 끝난 삼성 계열사들을 뒤지며 수사 시작 20일이다 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 수사팀의 압수수색 박스는 들어갈 때 가져간 그대로 텅텅 빈 채 나오기 일쑤다. 예컨대 삼성화재 ‘22층 비밀금고’가 있던 자리에는 이미 벽이 새로 들어섰고 문서 파쇄기 안에는 문서 찌꺼기가 가득했다.

물론 특검이 압수수색 후 빈 손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 한 삼성 직원이 말했듯이 “문서를 다 없애면 특검팀의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지하 4층에 특검팀을 배려해 일부 문서를 의도적으로 남겨뒀”기 때문이다.

고가의 미술 ‘작품’들은 포장을 뜯어보지도 않은 채 미술관 측이 제공한 리스트만

받고 수사를 마쳤다.

“0이 하나가 더 붙는” 떡값을 얼마나 배터지게 받아 먹었는지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이런 상황의 일등 공신은 “대기업 수사를 품위 있게 하라”며 사실상 은폐·축소 수사를 지시한 이명박과 ‘이건희 짜라시’ 노릇을 하는 언론들이다. 삼성은 ‘상식적 수준’에서 삼성을 비판한 한겨레·경향 등은 광고를 끊어버렸다.

주류 언론들은 태안 재앙에 대해서도 태안 주민 수천 명의 상경 시위 때만 잠깐 조명을 비추고는 금세 없던 일처럼 만들고 있다. 덕분에 삼성중공업은 올해 매출이 무려

9조 9천2백70억 원에 이를 것이라면서도 태안 주민들에게는 배상금 30억 원 이상은 절대 내놓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명박 특검

그나마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는 삼성 특검과 달리 이명박 특검 정호영은 시간 끌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거북이보다 느리게 하고 있는 수사도 대부분 검찰 수사 내용을 재검토하는 수준이다.

이명박과 범죄를 은폐한 검찰은 수사 대상으로 고려도 되지 않고 있다.

영성한 영장 청구로 사실상 ‘영장 기각’을 청구하다시피한 정호영 특검이나, 이를

핑계로 다스 본사와 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한 법원이나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이명박 비호 경쟁을 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정부, 대통령, 국회, 언론 등 이 나라 지배계급의 핵심이 모두 연루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공권력’은 없다.

특검 도입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오로지 아래로부터의 대중의 분노와 운동이 성장할 때에만 재빨리 양보하는 시늉을 했다. 따라서 부패한 정권과 오만한 재벌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노동자 운동과 사회운동의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장호중

팔레스타인인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가자 봉쇄를 분쇄하다

사이먼 아사프

중동에서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이 폭발할 가능성을 지난주에 볼 수 있었다. 국경 장벽이 무너지고 독재자가 굴욕을 겪어야 했고,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을 고무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이 산산조각났다.

지난 1월 22일 아침,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이 들이 이집트의 라파로 통하

는 팔레스타인이집트 국경검문소를 에워싸면서 [운동이] 시작됐다. 최근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는데, 시위대는 이집트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2000년 제2차 인티파다(민중봉기) 뒤로 가자 지구는 경제적으로 고립돼 왔다. 그러나 2005년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저항에 밀려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을 철거해야 했다. 이 불법 정착촌은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으로 가자 지구를 장악한 후 건설했던 것이다.

2005년 가자 정착촌 철군 이후 2006년에 하마스가 선거에서 승리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직면한 핵심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저항조직이다. 서방은 충격을 받았고, 이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음에도 서방은 하마스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집트 정부는 국경을 폐쇄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지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이집트 쪽에 살고 있던 가자 주민들은 출지에 오도기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2007년 6월에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는 쿠데타를 사주해 하마스 정부 전복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시도는 팔레스타인 보안군이 동참을 거부하면서 좌절됐다. 쿠데타 시도가 좌절되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가자 지구 봉쇄는 미국과 그 동맹자들이 팔레스타인을 굴복시키기 위해 채택한 전략의 핵심이었다. 가자 지역 주민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봉쇄는 이스라엘이 모든 연료 공급을 차단하면서 완전한 제재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1백50만 명의 평범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지내야 했다.

필사적

오랜만에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자 더욱 필사적이 된 팔레스타인의 여성과 아이 들은 지난주 국경을 향해 행진했다.

이집트 시위 진압 경찰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시위대 중 일부는 이집트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를 비난했고 성난 아이들은 경찰 방패를 마구 두들겼다. “아, 이 겁쟁이들아!” 하고 시위대가 외쳤을 때, 경찰이 진압을 시작했다. 50여 명의 여성들이 국경검문소를 넘어가자 이집트 경찰은 공포탄, 물대포, 곤봉 세례를 퍼부으며 그들을 다시 팔레스타인 쪽으로 밀어냈다.

악명 높은 무바라크의 경찰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필사적 몸부림을 짓밟았다는 소식

이 전해지자, 이집트 야당인 무슬림현재단과 사회주의자동맹 — 좌파 단체와 개인 들의 연합 — 은 카이로 시내 아랍연맹 건물 앞에서 수요일(1월 23일) 아침에 집회를 하고 호소했다. 아랍 곳곳에 있는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도 집회가 조직됐다.

놀란 무바라크는 보안병력을 동원하고 수요일 시위를 금지했다. 수백 명의 무슬림현재단과 좌파 활동가들이 집에서 자던 중에, 혹은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에 연행됐다.

무바라크의 보안병력이 카이로의 저항을 탄압하는 동안, 하마스 기술자들은 가자 지구와 이집트를 가르는 국경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사실 하마스의 기술자들은 아무도 모르게 오랫동안 6미터 높이의 철제 장벽을 절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요일 밤에 그들은 전체 장벽을 무너뜨렸다.

국경 장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집트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보안병력은 수많은 인파 앞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보안병력 중 일부는 국경검문소에서 이탈해 달아났고 나머지는 가만히 구경했다.

국경선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카이로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비록 4백50명이 넘는 핵심 활동가들이 연행된 상황이었지만, 카이로 중심가의 타히트 광장에는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공개 시위를 금지하려는 시도가 실패할까 두려웠던 이집트 보안 경찰은 카이로 시내 지하철역을 모두 봉쇄하고 변화가를 수색하다가 야부나 마구 잡아들였다. 이집트 국가에게 적은 모든 곳에 있었다.

카이로의 시위대들도 무바라크를 “겁쟁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집트 경찰들은 시위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1천5백 명을 연행했다.

그러나 무바라크가 아무리 시위대를 탄압해도 자신이 큰 곤경에 빠졌다는 사실을 감출 수는 없었다.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물결 앞에서 이집트 국경 경찰과 보안병력 들

은 우왕좌왕하다가 후퇴했다. 그래서 무바라크는 텔레비전에 나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초대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무바라크는 “무기나 불법적인 것들을 소지하지 않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서 가자 지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고 주장했다.

새로운 투사들

가자와 이집트 간 국경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무바라크의 26년 독재 정치는 더 약화됐다. 2006년 12월 이래 이집트에서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공장점거뿐 아니라 각종 시위들이 잇달아 벌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젊은 여성과 노동자 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대의 투사들이 탄생했다. 한 이집트 좌파 활동가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활동가는 “우리는 오랫동안 무바라크 정부의 혹독한 탄압을 받으면서 작은 활동들을 벌여 왔는데, 이제는 운동이 성장하고 기층에 뿌리 내리는 속도가 하도 빨라 감당하

기 힘들 지경이다” 하고 말했다.

무바라크 정부는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이다. 불과 2주 전에 조지 부시가 중동 ‘민주주의 국가 순방’ 중에 무바라크와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부시는 이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정부,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맞서 친미 동맹을 공고히 하려 한다. 이것은 제국주의와 지역 동맹국들에 맞선 모든 저항을 고무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부시의 방문 이후 가자 지구를 상대로 끔찍한 살육 행위를 다시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모든 연료 공급을 중단해서 가자가 암흑 속에 빠지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하마스 정부에 반대할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하마스가 굴복하기는커녕,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은 이스라엘 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봉쇄 계획이 실패한 것이다. 한 이스라엘 장관은 당황한 나머지 지난 목요일(1월 24일)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장관은 “가자의 다른 쪽 국경이 열린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 가자에서 물러나야 한다”하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가자 지구를 점령해 정착촌을 건설하고 무차별 국가 테러를 자행한 뒤 완곡하게 패배를 인정한 셈이다.

이스라엘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국무부 차관 니콜라스 번즈는 무바라크에게 전화를 걸어 국경 봉쇄를 요구했고, 미국 의회는 이집트 정부가 국경 통제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이집트에 대한 원조금 중 1억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위협했다.

한편 이집트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의 발언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스라엘의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축제의 장

이집트와 가자 지구 간 국경 지역은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목요일(1월 24일) 아침에 유엔은 “35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 가자 총인구 1백50만 명의 20퍼센트가 넘는다는 이 자동차나 버스 등을 이용해서 이집트로 넘어갔다” 하고 발표했다. 일요일(1월 27일)까지 무려 75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집트로 갔다.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집트의 친척과 친구 들을 방문하고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마음껏 자유를 누렸다.

이집트 정부는 라파에서 60킬로미터 떨어진 엘아리쉬에 새로 임시 국경검문소를 설치했다. 라파에 주둔중이던 미국과 다른 나라의 군사 옵서버들은 혼란의 와중에 기지에서 철수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밀려들어오자 그들은 장비를 챙겨 떠났다.

지난 금요일(1월 25일) 무바라크는 국경에 경찰을 파견했고, 보안병력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도우려는 이집트인들을 공격했다. 이집트 경찰은 시나이반도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구호물자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날 오후에 이집트 전투 경찰들은 라파 지역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다. 그들은 경찰 차단막을 형성해서 더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지구의 ‘감옥’을 탈출해서 이집트로 넘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다.

덕분에 전투 경찰들은 돌 세례를 받았고, 팔레스타인 투사들은 불도저를 이용해서 다른 쪽 국경 장벽을 무너뜨렸다. 일요일(1월 27일)에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지은 장벽이 완전히 박살났다.

이집트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사를 거슬러 하마스 정부 당국자를 초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로 물자 반입을 다시 허용해야 했다.

가자 지구에 대한 봉쇄와 점령은 끝났다. 당분간은 말이다.

1월 23일 카이로 언론인 회관 앞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

2008 카이로 회의 전 세계 반전 · 반신자유주의 활동가들의 한미당, 2008년 카이로회의에 참가합시다

이집트 카이로회의가 3월 27~30일 열린다. 카이로회의는 독특한 행사다. 카이로회의는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이집트인들이 조직해 왔다. 지금까지 반전 · 사회운동 · 노동운동 · 급진 정당 · 민족해방 조직 활동가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카이로회의에 참가했다. 한국에서도 2007년 카이로회의에 다함께 활동가들과 민주노동당 대표단을 포함해 90여 명이 참가했다. 2008년 카이로회의의 큰 주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기’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적 처벌 정책은 전 세계적인 반대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국경검문소를 뚫고 이집트로 넘어오자, 이집트 경찰은 수백 명의 활동가들을 연행했다. 하마스의 지도자들과 무슬림현재단이 올해 카이로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한국의 활동가들도 여기에 참가해 국제적 연대 건설에 함께하길 제안한다.

독일 주의회 선거

독일 선거에서 링케가 약진하다

많은 독일인들이 빈부격차 확대에 분노하면서 좌파에 대한 지지도 늘고 있다. 지난주 독일의 2개 주(州)의회 선거는 이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2개 주의회 선거에서 급진 좌파 정당인 링케[Die Linke, 좌파라는 뜻]가 선전하면서 좌파 진영 전체가 촉제분위기가.

링케는 옛 서독 지역 선거에서 최초로 약진했다. 링케는 니더작센 주와 헤세 주에서 각각 7.1퍼센트와 5.1퍼센트를 득표하면서 주의회에 진출하게 됐다.

우익 기독교민주당(CDU)은 많은 표를 잃었다. 독일의 경제호황 속에서도 생활수준이 향상되지 않은 독일 노동자들의 분노 때문이었다.

헤세 주의 총리인 CDU의 볼란트 코흐는 이주민 공격과 ‘청년 범죄’ 소탕을 주된 화두로 삼아 비열한 선거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헤세 주에서 CDU 득표가 12퍼센트나 줄었기 때문에 코흐는 CDU 지도자로 남기 힘들 것이다.

분노

한편 CDU와 연립 정부[이른바 ‘대연정’]를 구성하고 있는 독일 사회민주당(SPD)은 노동자들의 분노에서 이득을 챙기기 위해 급격하게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월간 <샤프트21>의 편집자인 스테판 보르노스트는 “엄청난 정치 급진화가 진행중입니다. 사람들은 부자들이 경제호황 성과를 독식하는 데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적했다.

“약 1백30만 명의 실업 노동자들이 정부가 임금을 보조하는 기업에서 일을 합니다. 그들은 실업수당과 똑같은 수준의 임금을 벌기 위해 주 45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보훈 시(市) 노키아 공장의 사재가 보여

주듯이 곳곳에서 공장 폐쇄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공장을 폐쇄한 기업들은 보통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습니다.

“링케는 노동자들의 분노에 호응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SPD도 그랬습니다.”

SPD는 링케의 일부 정책들을 흡수해서 자기보다 왼쪽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 SPD는 링케의 약진으로 다가올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지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SPD는 왼쪽의 압력을 계속 수용하면 ‘대연정’ 정부의 지속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스테판 보르노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공공부문 임금 협상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통합서비스산업노조는 8.5퍼센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큰 지지를 받고 있고, 몇 주 뒤부터 ‘경고 파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동시에 사장들은 CDU가 임금 인상을 억제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SPD는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것과 연방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연정’ 정부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링케는 선거 결과를 활용해서 수천 명의 신규 당원을 모집하고 독일 곳곳에 튼튼한 당 조직들을 건설하려 한다. 또, 선거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화에 반대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광범한 운동을 건설하려 한다.

보르노스트는 이렇게 지적한다.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 준 것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독일 좌파들은 역사적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 진정한 대중 운동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출처 : <소셜리스트 워커> 2008호

어떻게 링케는 독일 시민당의 대안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링케는 동독에 기반한 민주사회당(PDS)과 서독에 기반한 선거대안(WASG)이 힘을 합쳐 탄생한 정당이다. 두 조직은 이미 2005년 총선 때부터 선거연합을 결성해 왔지만 2007년 6월에 정식으로 합당했다.

링케는 우경화한 SPD에 맞서 진정한 좌파적 대안을 건설하기 위해 탄생했다. SPD는 실업수당을 대폭 줄이고 노동 유연화를 확대하는 ‘아젠다 2010’ 정책을 내놓고 아프가니스탄에 제국주의 점령군을 파병하는 등 지속적인 우경화 행보를 했다. 이 때문에 SPD 왼쪽에 커다란 공백이 생겼다. 최근 조사를 보면 SPD 당원 중 30퍼센트가 당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링케가 두드러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실망한 SPD 지지층에게 성공적으로 파고들어 지지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특히, ‘아젠다 2010’ 중 실업수당 삭감에 관련한 ‘하르츠IV’에 반대하는 활동을 통해 SPD의 야성인 통합서비스산업노조나 IG메탈 노동자들 일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또,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서 급진화하는 젊은층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링케가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매우 이질적인 정치 전통을 가진 세력들이 서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당(PDS)에는 옛 동독 스탈린주의 집권 정당이었던 사회주의통일당(SED) 당원 출신들이 상당수 있다. 그 중 대다수는 더는 옛 동독 모델을 대안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일부는 아직도 우호적으로 평가해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선거대안(WASG)의 다수는 옛 동독 모델에 반대하면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우파 정당들과 SPD에 맞서 진정한 좌파적 대안을 건설해야 한다는 대의에 동의하기 때문에 하나의 당에서 PDS와 협력적으로 일하고 있다.

‘친북적’이라는 이유로 자민통 경향을 속죄양 삼으며 자민통과의 공동행동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일부 세력들은 링케의 성공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김용욱

국경검문소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집트 보안병력

무너진 국경 장벽들

맑스와 《자본론》 ② 자본주의 상품 가치의 비밀을 들춰내다

이 글은 《자본론》에 대한 4회 연재 기사의 두 번째 편으로, 상품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본다

저번 기사는 의문을 하나 던지면서 끝났다. 우유 한 팩과 신문 한 부의 가격이 어째서 같은가?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기에?

맑스는 모든 상품이 두 종류의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사용가치다. 맑스의 설명에 따르면, ‘어떤 물건의 사용가치란 곧 그것의 효용성이다. 그러나 이 효용성은 허공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상품의 효용성은 그 상품만의 물리적 속성을 떠나서는 따로 존재할 수 없다.’

달리 말해 우유와 신문 사이의 공통점은 분명 사용가치가 아니다. 그 둘은 물리적 속성과 용도가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

두 번째 종류의 가치는 교환가치, 즉 한 가지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다른 상품의 양이다. 가령 신문 한 부는 우유 한 팩과 교환될 수 있고, 따라서 두 상품은 동등한 교환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저번 기사에서 설명했듯이, 이는 단순한 ‘물건’ 간의 교환이 아니다. 상품 하나를 돈 주고 사는 행위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관여한 방대한 사회적 관계의 그물에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

맑스는 신문과 우유처럼 언뜻 보기에 서로 무관해 보이는 상품들이 일정한 인간 노동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표면적인 교환가치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가치’라고 주장했다.

한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의 양을 반영하며, 노동의 양은 노동 시간으로 측정된다.

여기서 가치는 천문학에서 만류인력이 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만류인력을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혹은 냄새를 맡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만류인력 개념 덕분에 우리는 행성들의 공전 운동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본 사람이

라면 알 수 있듯이 만류인력의 효과는 매우 현실적이다.

마찬가지로 ‘가치’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왜 서로 다른 상품들이 동일한 교환가치를 지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가치를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그 효과는 현실적인 것이다.

물론 구멍가게 주인이 우유 한 팩과 신문 한 부를 그냥 교환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제3의 상품인 돈이 보편적 상품 구실을 하면서 교환의 전 과정을 더욱 신비스럽게 포장해 준다.

‘가치’ 개념에 대해서는 당장 두 가지 반론을 떠올릴 수 있다. 첫째는 모든 사람

노동자의 노동만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 중 일부

의 노동이 동등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열심히,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산 노동과 죽은 노동

맑스도 지적했듯이, ‘만약 어떤 상품에 투입된 노동량이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면 그 상품을 만든 노동자가 나태하고 미숙할수록 노동 시간이 더 들고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도 더 커질 것이라고 혹자는 생각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 즉 ‘특정 시기의 평균적 숙련도와 노동 강도’를 적용해 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해결된다.

두 번째 반론은 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상품을 만드는 것은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가령 신문 생산에는 기계, 잉크, 종이 등의 비인격적 요소들도 투입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도 상품에 속하며 따라서 선행한 노동의 산출물들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에서는 노동자가 직접 투입하는 노동인 ‘산 노동’과 원자재·기계류에 집적된 ‘죽은 노동’이 결합된다.

둘 사이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맑스가 말했듯이 산 노동은 최종 산출물에 가치를 새롭게 부가하지만 죽은 노동은 기존에 창출된 가치를 이전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신문이 산 노동 1시간(인쇄 기사들의 노동)과 죽은 노동 2시간(소요되는 자재와 마모되는 기계 가치)으로 생산된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 신문의 총 가치는 3시간의 노동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신문사 사장은 기계와 원자재 값을 부담해야 하므로 일단 2시간 상당의 노동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오직 산 노동만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이 경우 그 가치는 1시간의 노동이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에 제기된다. 만약 모든 상품이 그 가치대로 교환된다면 과연 산 노동의 가격은 얼마인가?

만약 인쇄소의 노동자가 자신이 창출한 가치를 전부 가져간다면 신문사 사장에게는 남는 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긴다는 것쯤은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다. 다음 글에서는 이 막대한 이윤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지 살펴볼 것이다.

조지프 추나라

이명박의 영어 사교육 ‘몰입’ 정책

이명박은 “영어 과외를 안 받아도” 대학가고 외국인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영어 공교육을 바꾸겠다며 여러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를 통해, 사교육뿐 아니라 조기유학도 줄여 ‘기러기 아빠’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국제 교류가 증가하는 요즘, 10년 넘게 영어에 매달려도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드는 영어 교육에 누구나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식 대책을 믿고 “과외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학부모는 거의 없다. 학원들은 환호하며 투자를 늘리고 있고, 이 때문에 세계적인 주가 폭락 와중에도 사교육 업체의 주가는 단 하루만에 15퍼센트 가까이 올랐다.

인수위는 2~3년 안에 학교에서 영어 말하기·쓰기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인수위가 주요 대책으로 내놓은 ‘영어수업교사 자격증 제도’와 ‘영어교사 삼진아웃 제도’는 교사 개인에게 영어 수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능력이 안 되면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등 국민

영어 말하기·쓰기 교육을 위해서는 원어민 강사 채용, 교사 신규 채용과 재교육, 학교 시설 마련 등에 엄청난 돈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인수위는 5년간 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도, 작은 정부와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동시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특히 학급 당 학생수가 40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말하기·쓰기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학생들은 늘어난 학교 영어 교육을 따라가기 위해 사교육에 의지해야 한다.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한다는 ‘몰입 교육’은 설사 가능하더라도 큰 문제를 낳을 것이다. 어려서 유학을 다녀오거나 비싼 영어 유치원 등을 다닌 학생들은 영어 수업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한국말로 가르치는 학원에서 학교 수업 내용을 다시 배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반발 여론이 크자 “국가 차원에서는 실시하지 않겠다”고 급히 번복했지만, 결국

자사고·특목고 등 일부 학교에서 ‘영어 몰입 교육’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학교 수업을 영어로 배운 ‘일등 국민’과 그렇지 않은 ‘이등 국민’이 뚜렷이 나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명박의 ‘영어 공교육 강화’는 ‘입시지옥’ 강화와 연결돼 있다. 수능에서 영어 과목을 없앤다지만, 상시적인 영어 인증시험으로 영어 읽기·듣기에 말하기·쓰기까지 추가되는 것이라 입시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다.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조기 유학을 보내는 부모가 대다수임을 고려하면 ‘기러기 아빠’는 되레 더 늘어날 것이다.

진정으로 영어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입시 경쟁과 연결시키지 말고 획기적인 투자로 양질의 교사와 교육 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강동훈

엔겔스와 여성 억압의 기원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

“자유를 향해 고동치는 심장”은
파리 코윈의 여성 투사 루이즈 미셀이
법정에서 자신과 파리 코윈의 대의를
방어하면서 한 말에서 따온 것이다.

여성 억압은 가장 뿌리 깊고 오래된 천대이기 때문에 영원불변한 인간 본성의 일부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여성은 언제부터 억압받기 시작했을까? 여성 억압은 정말 인간 본성의 일부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많은 역사가들과 여성학자들, 남성 우월주의자들의 대답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한다. 그 원인이 생물학적 이유이든 남성의 심리이든 여성 억압은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 보던 만화영화에서 여성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동굴을 돌아다니는 털복숭이 네안데르탈인의 익숙한 이미지 또한 이런 가정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맑스와 엔겔스의 대답은 달랐다. 인류 사회에서 여성 억압은 늘 존재하지는 않았고, 계급사회 발전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사실, 초기 인류 출현 이후 2백만 년 중 95퍼센트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여성 억압은 존재하지 않았다.

맑스와 엔겔스에게 ‘천성적인 것’은 없었다. 여성 억압은 사회의 물질적 역사에서 비롯한 것이다. 프리드리히 엔겔스는 “유물론적 관점에 따르면, 역사를 결정하는 요인은 직접적 생활의 생산과 재생산이다. … 그 하나는 생계수단, 즉 의식주의 생산과 이에 필요한 도구의 생산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자체의 생산, 즉 종족의 번식이다” 하고 말했다.

이러한 엔겔스의 관점을 집대성한 저작이 바로 1884년 출판된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다. 미국 인류학자 모건의 연구를 바탕으로 쓰여진 이 책은 1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성 억압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논쟁적인 저작이다.

계급사회

엔겔스는 현대 사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계급 이전 사회들에 관한 연구를 보면서, 이들 사회에서 삶의 방식과 남녀관계, 가족 구조가 자본주의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모건이 ‘야만’이라고 부른 시대를 엔겔스는 ‘원시 공산주의’라고 불렀다. 인류



프리드리히 엔겔스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서 수렵·채집 생활을 해 온 쿵족은 “매우 평등주의적”이다
여성 억압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는 소규모 공동체를 이뤄 살았고, 현재의 일부일처제 같은 가족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계급 없이 서로 평등한 지위를 누렸다. 이것은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였다.

성별 노동분업은 존재했지만, 이 때문에 여성이 차별받지는 않았다. 여성은 주로 채집을 담당했는데, 이를 통해 생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는 높았다.

엔겔스의 책이 출판된 이후 이뤄진 인류학자들의 연구로, 초기 인류와 선사시대에 대한 지식이 확장됐다. 엔겔스가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제시한 여러 예와 가정들은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틀린 것으로 증명됐다.

이것은 단순히 엔겔스 개인의 오류라기보다는 당시 인류학적 지식의 한계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간된 것이 겨우 1859년이었고, 1856년까지는 초기 인류의 유골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가족과 여성 억압이 계급사회의 결과물이라는 엔겔스의 핵심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초기 인류 사회의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호혜협력적이었다는 것은 엔겔스 이후 채집·수렵사회들을

연구한 여러 인류학자들에 의해 거듭 뒷받침됐다.

인류학자인 엘리너 리콕은 현존하는 채집·수렵 사회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사적인 토지 소유도 없었고 성별분업을 제외하면 노동분업도 없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맡고 있는 활동을 결정했다. 집단 활동은 무엇이든 합의해서 결정했다.”

또 다른 인류학자인 리처드 리는 자신이 연구한 칼라하리 사막의 쿵족(부시맨)이 “매우 평등주의적인 부족”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쿵족은 이런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문화적 관습을 발전시켰다. 쿵족은 솔손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견제하고 불행을 당한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 준다.”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지위를 누리던 ‘원시 공산주의’ 사회가 존재했다는 엔겔스의 주장은 여성 억압이 “인간 본성”의 결과라는 주장에 대한 통쾌한 반박이었다. 그렇다면 여성 억압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약 1만 년 전부터 인류 역사상 최초로

농업에 기반을 둔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 이것이 자동으로 여성의 지위를 하락시킨 것은 아니었다. 이 당시 농경에 사용된 도구들은 팽이처럼 가벼운 것이었기 때문에 여성들도 농경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뒤 쟁기의 발달과 더불어 더 복잡한 생산 체계와 분업이 등장하면서 여성의 지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생산성 향상을 낳았던 이러한 발전은 처음에는 사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생산을 지휘하고 관할하던 소수에게 잉여가 집중되면서 불평등이 생겨나고 계급이 등장했다.

무거운 쟁기를 사용하고 소와 말을 기르는 더 발달된 농경사회에서 여성들은 더는 아이들을 기르고 젖을 물리면서 일을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밭일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노동력이었다. 여성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롭게 작용하면서 여성의 역할은 주로 재생산 영역에서 이뤄지게 됐다. 여성은 사회의 주된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영향력이 하락했다.

계급사회가 발전하면서 개인 재산을 세습하는 장치로써 일부일처제 가족제도가 발전했다. 여성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종속된 지위로 전락했고,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관념이 사회 전체에 널리 퍼졌다. 엔겔스는 이러한 과정을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라고 불렀다.

여성 억압이 계급사회의 등장에 따른 결과라는 엔겔스의 주장이 지닌 실천적 함의는 매우 중요하다. 엔겔스는 여성 억압을 낳은 사회적 조건을 분석함으로써 억압을 없앨 수 있는 전략—현존하는 계급사회를 폐지하는 것—을 내놓았다.

이것은 오늘날 대다수 페미니스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가부장제 이론과는 사뭇 다른 결론이다. 가부장제 이론은 여성 억압이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존재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억압을 끝장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기껏해야 현존 사회 내에서 억압을 완화하는 데 그치거나 ‘남성과 단절한 공동체’라는 실현 불가능한 대안만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엔겔스가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을 썼던 때는 성과 결혼, 가족에 대한 보수적 관념이 지배적이던 시대였다. 당시의 결혼한 부부가 임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는 것조차 비난받았다. 남성과 여성의 성 행동에 대해 지독한 이중 잣대가 적용됐다.

부르주아 가족제도의 위선을 폭로하고 여성 해방의 전망을 밝힌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은 무척 선구적인 저작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여성을 짓누르고 있는 억압을 깨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엔겔스의 고전은 무한한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예송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중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되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첼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서평

김앤장 - 비리 재벌과 부패 권력의 해결사



《법률사무소 김앤장》

임종인·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재벌 비리와 권력형 부패 사건을 도맡아 축소·무마하고 엄청난 돈을 버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이다.

이 책은 3주 만에 7천 부 넘게 팔리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김앤장의 주 고객은 재벌과 투기자본이다. 특히 삼성과 김앤장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 김앤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했고, 대선자금 수사 때도 삼성의 뒤를 봐주고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 전 삼성 법무실장 이종왕은 김앤장 변호사로 있던 시절 이학수의 ‘안가’에서 대선자금 수사 축소와 무마를 협의하기도 했다. 지금도 태안 현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

김앤장은 ‘조폭재벌’ 김승연의 폭행 사건, 정몽구·김우중·박용성의 비자금 사건, LG와 현대차의 대선자금 사

건 등 재벌 비리 사건도 도맡아 왔다.

국내에 들어온 투기자본들도 예외 없이 김앤장과 계약을 맺는다. 김앤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입도 주도했다. 이번에 론스타 회장 그레이켄이 무사히 출국한 것도 김앤장 덕분일 것이다.

김앤장은 한국의 국가기구를 주무르고 있다. 2007년 8월 말 현재, 김앤장에는 정부 고위직 출신 변호사 63명이 근무한다. 국세청·재경부·공정거래위·산자부·관세청·노동부·청와대·보건복지부·감사원 출신은 물론, 주한미상공회의소 전 회장도 김앤장에 고용돼 있다.

법조계의 삼성

김앤장에 들어온 퇴역 관료나 관리대상 인사는 엄청난 돈을 받는다. 고문으로 있던 전 법무부장관 최경원은 2006년 7월 한 달 급여만 무려 1억 9천9백90만 원이었다. 전 국무총리 한덕수는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뒤 김앤장 고문으로 가서 한 달에 1천7백만 원을 받다가 총리로 기용됐다. 이현재도 대표적인 김앤장 고문이었다.

한편, 김앤장 출신 인사가 정부에 입각했다가 다시 김앤장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여기에 김앤장 로비력의 비밀이 있다. 이 인맥을 활용해서 김앤장은 자신들의 의견을 정부 입장으로 채택해 영향력을 과시하고, 그 과정에서 재벌과 투기자본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돈벌이를 한다.

‘법조계의 삼성’이라는 별칭은 빈말이 아니다. 김앤장은 국내 로펌 수입

액의 40퍼센트를 차지한다. 김앤장의 ‘김’인 김영무는 2006년 연소득 6백억 원을 신고했다. 같은 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 가운데 연소득 10억 원 이상 변호사가 54명에 달했다.

이들의 고수익은 노동자들이 흘린 피눈물의 대가였다. 김앤장은 기업 인수·합병과 해외 매각 등 구조조정에 참여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급성장했다. 진로 재매각, 한전·KT&G·한국통신 민영화, 이랜드 박성수의 홈에버 인수에도 끼여들어 돈벌이를 했다. 이명박이 추진할 공기업 사유화 구조조정도 김앤장에겐 엄청난 돈벌이 기회가 될 것이다.

김앤장의 ‘장’인 장수길은 국제투자 분쟁중재센터에 중재위원으로 있다. 한미FTA로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도입되면 김앤장은 투자자의 소송 대리료 막대한 수입을 올릴 것이다.

김앤장은 노조 탄압으로도 악명 높다. 잘 알려져 있는 흥국생명 노조 탄압뿐만 아니라, 한국바스프·미래에셋생명·알리안츠생명·도쿄미쓰비시은행·테트라팩 등의 구조조정과 노조 탄압에 관여했다. 동우공영에서는 비정규직 노조 파괴 자문료로 1억 1천만 원을 받았다.

김앤장의 변호사들은 비리재벌과 투기자본에 빌붙어 악행을 일삼는 압적인 존재다. 김앤장에 의해 해고된 이책의 저자 장화식 씨가 참여하고 있는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의 요구대로, 김앤장을 압수수색하고 삼성 비리와 론스타게이트 의혹의 몸통을 수사해야 한다.

정종남

이랜드 투쟁에 연대하라

이랜드 노동자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집중 매장 타격 투쟁을 위해 다시 한번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세계 공동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랜드일반노조 홍윤경 사무국장은 “이랜드 투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설 연휴를 앞둔 투쟁에 적극 연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회사측은 어용조직을 만들어 노조 파괴를 추진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생계비 곤란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노동자들은 재미있는 ‘홈쇼핑 UCC’까지 만들며 설날 특판 재정 사업에도 열심이다.



하지만 이랜드 사측도 “맥주, 쌀 등이 불법적인 카드깡으로 팔려나갈 정도로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랜드 노조는 홍콩 노조와 연대해 이랜드 중국 법인의 홍콩 증시 상장도 막을 계획이다. 지금은 조합원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줄 수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실질적 연대 조직과 생계비 지급이 절실하다.

다행히 민주노총 지도부는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연대 투쟁을 결의했고, 2백71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전국적으로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집중 불매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월 1일 울산 노동자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반드시 승리해서 홈에버 앞에 솔단지를 걸고 모두 함께 승리의 축배를 들고 싶다”는 여성 노동자들의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연대를 확대하자.

최영준

2월 1일 전국 동시다발 매장타격투쟁

서울 지역은 홈에버 면목점, 오후 3시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 reader@counterfire.or.kr / 전화 : 02-2271-2395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서민의 등골을 뺏는 등록금 폭등을 저지하자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 당국들은 등록금을 대폭 인상했다.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은 10퍼센트 안팎의 등록금 인상률을 발표했다.

국공립대들은 주요 사립대들보다 더하다. 부산교대는 25퍼센트, 강원대는 24퍼센트, 부경대는 무려 30퍼센트의 인상안을 발표했다! 올해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의 최고 10배에 이른다. 강원대와 동아대처럼 아예 로스쿨 유치 비용을 학생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킨 대학들도 있다.

대학들은 적립금을 무서운 속도로 쌓아가지만, 2007년 재단 전입금은 전체 대학 운영 수입의 0.9퍼센트에 불과했다.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등록금 지원 정책은 되레 후퇴하고 있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금리는 꾸준히 올라, 이제 보통 대출금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국회는 올해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안 기금을 1천억 원이나 깎았다.

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만 3천 명이 넘는다. 전체 학생의 15퍼센트가 등록금 때문에 휴학 중이고, 80퍼센트가 등록금에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부모의 연봉이 적어도 9천만 원은 돼야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명박의 '대학 자율화' 기조는 등록금 폭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명박은 대학의 '재원 다양화'라는 명목으로 정부의 형편없는 재정지원조차 더 줄이려 한다. 또 국공립대 단계적 법인화 조치도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더욱 인상시킬 것이다.

올해 등록금 인상에 맞선 투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부경대에서는 겨울방학임에도 불구하고 1월 24일 등록금 인상 반대 학생총회에 무려 5백여 명이 모였다. 학생운동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전국 대학생교육대책위도 2월 2일에 전국대

학생 1차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과 힘을 모아 등록금 인상과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김영익

2008년 등록금 동결과 이명박 정부의 교육 시장화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전국대학생 1차 공동행동

일시: 2008년 2월 2일 오후 3시

장소: 청계광장

주최: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망향휴게소 노동자들의 값진 승리

1월 22일 망향휴게소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 협약을 맺고 승리를 쟁취했다.

노동자들은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월차·복지수당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 전환 대신, 2008년도에는 기본급 4만 원 인상에 정률 기본급 4퍼센트 인상을 쟁취했고 월 유급휴가를 현행 5일에서 6일로 연장했다.

지난해 4월 이후 노동조합을 아예 없애고 외주화하려는 사측의 도발을 완전히 좌절시킨 것이다.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이 사측의 살

벌한 탄압을 뚫고 얻어낸 성과라 더욱 값지다.

36명 전원 징계와 해고, 감금, 집단 폭행, 성추행,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는 살해 협박, 늦은 밤 복면 쓴 괴한들의 미행, 목과 다리를 절단한 목각 인형 놓고 사라지기 등 사측의 탄압 행태는 그야말로 ‘엽기’ 그 자체였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은 모든 걸 이겨내고 끈질기게 투쟁했다.

다른 부문의 노동자 연대도 큰 몫을 했다.

이른바 “화물연대 곡괭이 사건”의 누명을 쓰고 구속된 노동자들(지금도 8명의 화물연대 노조원들과 망향휴게소 노조 위원장이 감옥에 갇혀 있다)과 타워크레인, 덤프연대, 충남 지역노조, 금속노조, 민주노총 충남본부 등이 망향휴게소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

망향휴게소 투쟁이 보여 준 단호함과 노동자 연대야말로 이명박 시대에도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오정숙

47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한 알리안츠생명노조

지난 1월 23일부터 알리안츠생명 노동자 1천여 명이 사측의 일방적 차등성 과급제 도입과 노조 탄압에 맞서 일주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다. 노조는 월급 날인 21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자 바로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해 말 95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였다.

사측은 근무성과를 S, A, B, C, D 등 5단계로 나누고 S등급은 2백 퍼센트, D등급은 0퍼센트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 차등성과급제가 도입되면 매년 노조원 약 85명이 D등급을 받아 구조조정 1순위가 된다.

사측은 또 노조 웹사이트를 해킹해 얻은 자료를 근거로 노조 간부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제종규 노조위원장은 파업출정식에서 “노예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승리해 노동조합을 목숨 걸고 지키자”고 강조했다.

노조가 생긴 이래 47년 만의 첫 파업이라 조합원들의 투쟁 경험은 부족하지만, 현재 9백여 명이 파업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지점장 2백70여 명도 파업을 앞두고 노조에 가입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노조는 애초 25일까지 2박 3일 경고 파업을 벌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조원들이 각자 1백만 원씩 파업 기금을 내는 등 투지를 불태우자 마감이 집중된 월말을 지나 2월 1일까지 파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사측은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 가운데 일부는 설 연휴에도 파업 대오를 그대로 유지하자며 투지를 나타내고 있다. 노조는 월말이 이번 투쟁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재

공공부문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맞서 2월 1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필수유지업무’ 제도라는 악법이 파업을 가로막고 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2006년 한국노총 지도부와 노무현 정부의 소위 ‘9.11 노사정 야합’으로 도입된 것으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못하게 원천봉쇄해 파업의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도시철도공사 사측이 제출한 필수유지업무 안을 보면, 승무·선로·관제 업무는 1백 퍼센트, 차량·신호 업무는 60퍼센트 등이 필수업무로 지정돼 파업에 참가할 수 없다.

심지어 가스산업의 경우 90퍼센트에 이르는 업무가 필수업무로 지정될 것이라고 한다.

필수업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도 매우 비민주적이다.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

지 못하면 지방노동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도시철도의 사례에서 보듯 노사 합의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노동위원회가 노조의 파업에 유리한 결정을 할 리는 없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무엇보다 개별 노동자들을 직접 겨누고 있다. 만약 제도를 무시하고 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는 민형사상의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쓰나미’를 밀어붙이려는 이명박은 노동자 투쟁을 가로막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선물해 준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라는 노래처럼 단호히 싸워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각종 노동 악법을 깨뜨려야 한다.

최용찬

전공노의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투쟁

이명박 정부의 농업진흥청 폐지 정책에 맞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월 26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조합원 4천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농업진흥청 폐지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천명했다.

손영태 위원장은 “민생경제는 포기하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를 추진하려는 불도저식 이명박 정권에 대한 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농촌 경제를 말살하는 농진청 폐지안과 정부부처 통폐합은 묵묵히 일한 동지들의 생존권을 내동댕이치는 것이다.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더 큰 투쟁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농업진흥청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

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농업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품종 하나를 개량하는 데 수십 년씩 걸리는 데 어느 누가 진지하게 투자를 하겠는가? 기껏해야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소수 품종 개량에 그칠 것이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농촌을 더욱 피폐하게 할 것이다.

이익을 내야만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연구에 매달리기보다 돈 벌이에 급급하게 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자부심보다는 언제 퇴출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내몰리게 된다.

이명박 인수위의 농업진흥청 폐지 입장을 철회시키기 위해 손영태 위원장이 주장했듯이 더 큰 투쟁을 준비하고 대정부 투쟁에 매진할 때다.

이재열(공무원 노동자)



‘일심회’ 사건 변호인 김승교 변호사 인터뷰

“‘일심회’ 사건의 본질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민주노동당 공격”

‘일심회’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심상정 비대위의 최기영·이정훈 당원 제명 추진을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로 본인들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둘째로 백보 양보해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비대위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도 일심회의 실체를 부정했습니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국가 기밀 탐지·수집·전달과 관련해서도, 이정훈 당원의 경우 1심에서 일부 무죄, 2심·3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최기영 당원의 경우에는 일부만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최기영 당원과 관련해] 비대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3백44명 당직자들에 관한 정보와 조선사민당과의 교류를 위해 당의 방북단으로 거론되던 사람에 관한 정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지역위 사무국장들의 이름·소속·나이·출신 학교·소속단체·노선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 약 1백50명의 사무국장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당내 선거와 관련해 어느 그룹이든 작성할 수 있고 작성했을 법한 일반적 자료로 보입니다. 대부분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이 누구다, 몇 년생이다, 이런 것을 파일로 갖고 있었다고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기밀이란 규정이 우리 나라만큼 넓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조금만 뒤지면 나올 만한 자료들이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이면서 사상과 정치 활동 자유의 문제, 양심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심회’ 사건은 본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진보 운동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격이고 음해인 것입니다.



2006년 11월 3일, 국정원 앞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마녀사냥 규탄 집회

‘양심수’에 대한 네이버 백과사전의 정의를 보면,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이나 민족적 기원, 피부색·언어·국가·사회의 차이, 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해 투옥·구금된 모든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본다면 최기영·이정훈 당원은 1백 퍼센트 양심수인데, 이들을 제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이 당원 정보를 외부 세력인 북한 당국에 넘긴 것은 ‘간첩 행위’이지 사상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문건들이 왜 당의 기밀이 됩니까? [당 총무실에서 발행한 당직자들의 연락처가 적힌 민주노동당 책자를 보여 주며] 여기엔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개인 핸드폰 번호 등 당원 7백 명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건 당의 기밀입니까? [‘일심회’ 문건은]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이것의 열 배 이상을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고, 국민승리21 활동을 했고, 무슨 노동조합 간부 활동을 했다 … 이런 게 기밀인가요?

그렇게 본다면, 당 총무실 책자나 비대위원들 약력이 실린 이변 호 <진보정치>도 징계 대상이 되겠죠.

도대체 어디까지가 외부세력인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한총련, 한국노총 같은 곳에 소속된 당원들이 그 단 위에서 요즘 민주노동당의 내부 현황을 전하면, 그 당원은 외부 세력에게 정보를 전했기 때문에 징계 받아야 합니까? 한 발 더 나아가, 국외의 각종 진보적 인사·단체·정당과 교류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해 일본 공산당과 평화 운동 관련해 교류한 적이 있었는데, 요새 민주노동당이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당의 정보를 누설한 것입니까?

저는 정치 활동의 자유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세력·그룹이 모여 만든 연합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이 틀 내에서 어디까지는 된다, 예컨대 일본 공산당과 교류하는 것과 관련해, 조선노동당과 교류하는 것과 관련해, 쿠바와 교류하는 것과 관련해, 영국 노동당과 교류하는 것과 관련해 합의한 선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

금 이것을 부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국가보안법 때문에 오직 북한 관련해서만 문제삼는다는 것은 비열한 것입니다.

이른바 ‘종북주의 청산’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여론을 빌미로 사상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후퇴·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누가 ‘과격 정당’, ‘테모 정당’ 이미지가 있다고 비판하면, 각종 집회에서 ‘폭력’ 휘둘렀다고 처벌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당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것이니까 출당시켜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문제인 것이지요.

비대위가 다양성, 사상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신뢰·존중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만 정치적 조율·타협이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 쪽을 공격해서야 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정리 조명훈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기영 당원의 부인 김은주 씨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가족들을 두 번 죽이지 말라”

1월 30일, ‘일심회’ 구속자 가족들과 변호인단 등이 심상정 비대위의 최기영·이정훈 제명 결정 철회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훈 씨의 아내 구선옥 씨는 비대위의 결정에 충격을 받아 실신했다가 기자회견에 겨우 참석했다.

가족들은 두 사람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비대위가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에 분개했다.

구선옥 씨가 “‘간첩’ 딱지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십 년 세월을 고틱을 함께했던 당에서조차 외면한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울먹일 때 기자회견 참가자 모두 눈시울을 적셨다.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장인 권오현 씨는 “북한 출신이고 빨치산 활동도 했던 비전향장기수들조차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양심수로 인정받았는데 진보정당이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제명하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고 했다.

김승교 변호사는 “법원 재판에 이어 진보 진영 내에서 또 하나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

는 현실을 개탄했다. ‘당원 정보 유출’ 논리에 대해서도 “평가대상이 된 당사자는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술자리에서 인물평을 한 것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며칠 전부터 심상정 비대위와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직 분명한 답도 없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민주노동당이 두 당원을 제명할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맞선 투쟁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호소했다.

최미진